

부산 및 광양항 배후수송망 조기개발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

위원회, 부산신항 배후도로 2008년에 완공

정부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도로 등 배후수송망의 적기구축과 항만배후부지의 조기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월4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배후수송망 및 배후부지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부산신항 개장, 외국물류기업 유치 등 당면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부산신항의 경우 오는 2008년말까지 총 18선석이 완공되는 반면, 신항만과 초정IC를 연결하는 배후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보상지연과 투자비 부족 등으로 2009년 이후에나 완전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됐다.

또 광양항의 경우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양-구례 구간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사업 중 광양-구례 구간의 조기개통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산신항 배후도로를 2008

년까지 완공시키고, 광양-구례간 고속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소요예산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말 위원회에서 재협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부산신항 북측 배후부지 또한 2006년까지 공급예정인 22만평 외에 2012년까지 공급예정인 15만평에 대해서도 2008년말까지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산시 등에서 요구한 물류부지 확대방안에 대해 면밀한 수요 예측과 추가소요예산 등을 분석해 그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활동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혼선예방을 위해 해양부가 투자유치활동을 주관하고 관련 일정 등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말 완공예정인 부산신항 1단계 3선석의 원활한 개장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부산신항 개장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위원회 산하 각 실무기획단에서 소요예산, 세부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와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친 후 오는 4월 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게 된다.

